

日本에서의 反原電運動 現狀과 對應

坂 本 俊

〈(財)日本原子力文化振興財團 PA情報調査室長〉

금년 4월 東京 日比谷공원에서 개최된 반원전시민그룹에 의한 체르노빌 사고 4주년 전국 집회에는 약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유의 전국집회는 매년 체르노빌사고가, 발생한 4월 26일 전후에 개최되고 있는데 재작년 봄의 집회(東京·日比谷공원)에는 1만명 이상이(주최측 발표 2만명) 참가했고, 작년봄의 집회(多摩川·六郷土手)에서는 약 3,000명이 모인 점을 감안하면 동원수는 저하 경향에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소련사고와 방사능 오염식품의 수입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또는 환경보전 등의 시민활동, 자연식품지향 등 소비자운동의 활발화에 연동해 반원전운동에 참가한 시민그룹 등의 이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재의 반대운동은 반원전의식과 깊은 연대조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반대그룹은 새로운 시민과 그룹의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반원전」의 기치 대신 「탈원전」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목표도 지금까지의 「원전」에 덧붙여 「핵연료사이클」 「핵폐기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잇따른 국정선거, 지방선거에의 관여 등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脫原電 署名運動과 國會請願

탈원전법의 제정을 목표로 한 전국서명운동은 1,000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일본 각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운동은 서명활동을 통해 탈원전운동의 전국적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법의 내용도 일반의 찬성을 얻기 쉽도록 ① 건설중, 계획중인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시설의 즉시 중지, ② 운전중인 원전은 일정한 경과조치 기간내에 모두 폐지, ③ 방사성폐기물은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자의 책임으로 관리한다 등을 골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정했던 동년 10월의 집약을 6개월 연장해 금년 4월에 발표된 서명자수는 305만8,053명으로 목표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4월 하순 주최자인 탈원전서명전국네트워크는 그 중 약 250만명분의 서명부를 첨부해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 청원했습니다. 약 50만명의 서명을 보관해둔 것은 이번엔 청원해도 국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대로 청원은 중의원 과학기술위원회, 참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회의 각 이사회에서 협의한 결과 보류되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취측은 미제출한 약 50만명분의 서명을 베이스로 서명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내년 4월 다시 국회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2. 脫原電 株主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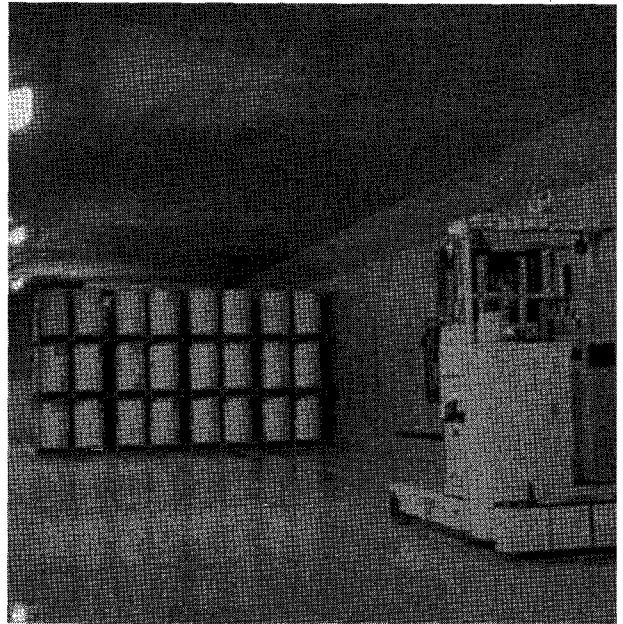
작년 후반경부터 전력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수시로 자료요구, 질문을 하고 특히 주주총회에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경영진에게 원자력발전의 포기를 요구하려는 탈원전 주주운동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미 일부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그 범위를 모든 전력블록으로 확대했고, 또 각지를 잇는 연대조직도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6월의 각사 주주총회에는 다수의 탈원전주주가 참석, 사전에 제출한 수천항목이나 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요구를 비롯해 동의권 연발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각사는 이 질문에 일괄응답한다고 하여 총회를 벗어났지만 탈원전주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법에 의거 총회의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전문제는 상법상에서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3. 核燃料사이클 反對運動

靑森縣 六個所村에 건설중인 핵연료사이클시설에 대한 반대운동은 지역의 농업관계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동요, 지역주민과 반원전운동가의 공동행동으로서의 「核燃訴訟」, 關東지구의 시민그룹을 주체로 한 반핵연운동 등에 일부정치단체와 노조 등의 동조가 얹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핵연」을 제창한 시민그룹은 東京과 현지를 무대로 지원집회, 선전활동, 서명운동 등을 적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그룹이 참가해 리더쉽의 쟁탈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말 六個所村 촌장선거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사이클시설 건설에 대해 「추진」 「동결」 「백지철회」를 내건 3명이 입후보했습



니다. 반대시민그룹은 백지철회후보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백지철회를 주장한 후보자는 5%에도 미치지 않는 지지로 낙선했습니다. 최대의 목표는 내년 2월에 실시될 靑森縣의 縣知事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사선거를 위해 기존그룹의 연대와 새로운 그룹의 참여 등 반핵연운동은 지금부터 점점 활발화, 첨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北海道의 幌延町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공학센터」에 대해서는 幌延町의회가 6년 전에 유치를 결의했습니다만 주변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어 이것을 北海道지방을 중심으로 한 시민그룹이 지원하는 형태로 결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는 北海道의회에서 그 시설에 반대하는 결의가 채택되는 등 상황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岡山縣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거부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34만명이 서명한 내용이 8월 하순부터 각지의 선관위에 제출되고 있는 등 고준위폐기물을 둘러싼 주민·시민운동이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4. 對應活動

PA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반대 움직임에 대해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의 보급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활동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여론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반원전운동의 영향도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의 약 반수가 원자력에 비판적인 현상황을 생각하면 종래부터 해 온 자료와 팸플릿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수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중의 “문자탈피”가 현저한 근년의 일본에 있어서는 정보의 시각화, 영상화 등과 더불어 「대화형식」에 의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베스트믹스”라는 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금년도 언젠, 어디서나 전문가를 보내는 강사파견제도에 의한 대화활동 약 100회, 각지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약 70회, 원자력시설의 입지지점과 예정지점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화집회 또는 견학집회 약 10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식에는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최빈도에도 자연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전화에 의한 응답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해진 다이얼을 돌리면 전문가가 대화형식으로 어떤 의문에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원자력공학시험센터의 「텔레폰 질문상자」가 그 예입니다).

또 최근에는 퍼스널 컴퓨터통신에 의한 정보제공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스트·컴퓨터에 관련정보를 입력해 퍼스널·컴퓨터만 있다면 한밤중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공학시험센터의 「아톰·네트」와 생활·시민모임의 「에너지·네트」 등이 있습니다).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PA활동의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로서 보다 체계적인 지식보급이라는 관점에서는 교육, 특히 학교교육문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도 매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고교생을 위한 방사선실습세미나 등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만 정규과정에 의한 원자력교육은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교육의 본질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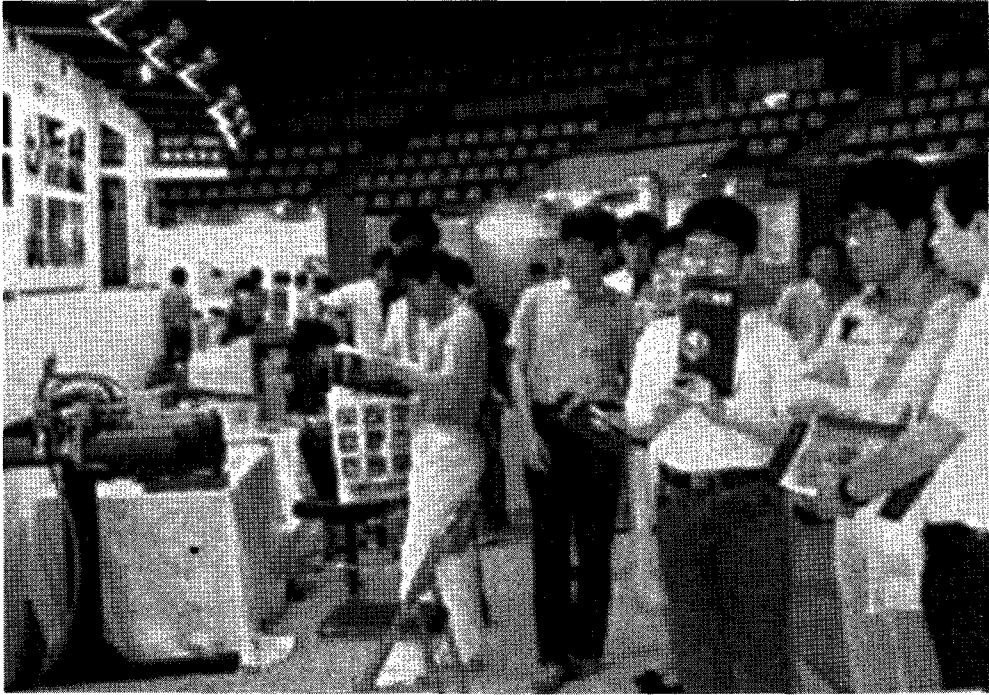
그리고 당 재단에서는 청소년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테마를 정해 중·고교생의 논문을 모집하고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작품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협력을 얻어 최우수 입신자에게 한국으로의 연수여행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5. 反對運動을 둘러싼 情勢

과거 1년여에 걸쳐 반원전운동의 구심력이 되어 있던 탈원전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었지만 서명수의 비약적인 신장은 기대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번의 국회청원으로 끝났다는 견해가 강한 것 같습니다.

탈원전 주주운동은 새로운 운동으로서 각지에 확산되고 있지만 시민운동으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반원전운동은 지금 새로운 테마와 전술을 찾아 모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금년 여름 일본의 전력수급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전기는 남아 돈다」는 반대파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실감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최근의 석유가 상승은 석유에 의존하는데 대한 불안정함을 새삼 인식시키는 등 반원전운동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스위스나 스웨덴의 움직임도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신설허가를 10년간 내주지 않겠다」는 스위스 주민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규시설의 영구금지, 기존시설의 조속한 폐지」안이 부결된 것은 사실이고, 똑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탈원전운동에 있어서는 “쓸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스웨덴의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폐지한다는 현행정책의 재검토를 결의한 것은 아직 정당수준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여당의 움직임인만큼 지금까지 「세계는 탈원전을 향하고 있다」는 캐치프레이즈하에서 제일 먼저 예로 이용해 온 반원전과에 있어서도 큰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6. 앞으로의 反原電運動

이런 정세하에서 반원전그룹이 그 운동과 조직의 유지를 도모해 가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호소효과가 있는 보편성을 가진 테마를 찾아내 전국적인 반원전운동의 핵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것은 핵연료사이클시설을 목표로한 「반핵연운동」에 한층 열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내년 2월의 靑森縣지사선거 또는 4월의 통일지방선거까지는 일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과 연동해 고준위폐기물을 목표로 한 「핵폐기물」 문제도 클로즈업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구미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에 처해 있는 플루토늄문제와도 얽혀 국제적인 테마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에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반원전운동은 현재 세계적인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근년에 한일연대의 움직임이 현저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호 밀접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